

與 “엄정한 수사를”... 野 “제2의 국정농단”

‘명태군 논란’ 확산

韓 “정치 협잡꾼 활개... 구태정치” 당 지도부 “꼭 구속해야” 강경 대응 민주당 “대통령실 대응 소극적” “김건희 특검 수용만이 위기 해결”

여야 정치권은 10일 연일 확산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군씨 관련 논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명씨를 ‘협잡꾼 정치 브로커’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선을 긋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실상 ‘제2의 국정 농단 사태’라며 특검 수용

을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명태군씨, 김대남씨 같은 협잡꾼 정치 브로커들, 정치권 뒤에서 음험하게 활개치는 것 국민들은 모르셨을 거다. 저도 몰랐다”며 “전근대적인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관련된 분들은 자신있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밝히라”며 “이런 정치 협잡꾼들에게 대한민국 정치가 휘둘리고 끌려다녀서야 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 안에서도 구속을 촉구하거나, 책임당원 명부 유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분이 이제는 허풍을 치다가 못해 ‘자신이 입을 열면 대통령이 하야 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농담이었다는 헛소리까지 하던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수사를 해서 한번 꼭 구속해달라”고 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원 명부 유출 논란에 대해 “전혀 위법한 점이 없는 적법한 사안이었다”면서도 “이 당원 명부가 그 이후에 명태군이란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갔

는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지금부터 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자고 나면 명 씨의 새로운 공천 개입 증거들이 터져 나오고 명 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대응이 전례없이 소극적이라는 점도 의문을 자아낸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법

적 조치를 남발하면서 왜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오는 명 씨와 천공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개혁의 최대 장애물은 사상 최악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윤 대통령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고, 온갖 범칙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해명을 하지 않고 대통령 행세를 하는 김 여사”라고 직격했다. 그는 “김 여사 문제를 풀지 않고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없다. 김건희 특검 수용만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며 “땀땀하다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상설 특검(특별검사)을 조용히 수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진욱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로 39조원 피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은 10일 “국내 우수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난 11년간 39조원이 넘었다”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210건에 달했으며, 이 중 55건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55건 유출 사건은 △조선 17건 △반도체 11건 △디스플레이 10건 △이차전지 5건 △자동차 5건 △정보통신 3건 △기타



4건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피해 추정액만 약 39조15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해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분야별 맞춤형으로 기술 유출 사례 공유·보안관리 규정 정비·피해 발생 시 대응 방안 안내 등 실질적인 사전 대책과 사후 대응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라오스 손싸이 시판돈 총리, 중국 리창 총리. 뉴스

박경미 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지원 근거 마련”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전남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사진)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발생 방지, 피해자에 대한 비밀준수와 신속한 치료, 의료기관·보호시설과 같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일명 ‘문지마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순천에서 발생한 문지마 범죄로 안타깝게 숨진 10대 학생을 추모하면서 조례의 필요



성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됐다”며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산을 이끄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남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 예방교육·홍보·지원정책 개발·환경개선·피해자 치료비 지원 등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尹,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선포

라오스 ‘한-아세안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올해는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 지 35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구축해온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

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세안이 지난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 단계로의 격상이다.

이로써 아세안은 11개 대화상대국 중 CSP를 수립한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6개 국가가 됐다. 한-아세안이 CSP로서 새로운 35년을 위해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핵심축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도 제시했다.

아세안 정상들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환기시키고 강력한 연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 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고 역설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야당, 행안위 국감서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집중 추궁

김영선 등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중앙선거위원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선 전 의원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 선거 공천’ (2022년 6월), ‘김 전 의원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이동’ (2024년 2월)에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군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조사의 핵심이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명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명 씨는 지난 대선 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3억7000만 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에 그 대가로 21대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아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 씨 말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고 그 대가로 공천을 해 준 것”이라며 “중앙선거위는 이런 선거법에 대해 조사·고발할 수 있다. 김 여사, 명 씨, 김 전 의원 등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홍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조사를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다”며 “사실 관계 조사가 안 되는데 고발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 씨는 선거가 끝난 후 여론조사 비용 정산을 위해 윤 당선인 부부를 찾아가지만 정산 대신 2022년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공천권을 갖고 온다”며 “윤 (당시 대선) 후보가 명 씨한테서 3억7000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대세론이 형성됐다. 전문 변호사

의 자문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고보다 욕심이 많은 정치인과 허풍이 있는 ‘꾼’ 비슷한 사람이 협박을 해서 자신의 실수를 행하기 위해 대통령과 김 여사를 판 사건”이라며 “비난해야 될 사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이분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명태군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하기도 했다.

여당의원들이 항의하자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다.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재석 의원 21인 중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선거정보 Q&A

Q. 우리 지역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되며,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지난 6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됐습니다.
Q. 기표대에 가림막이 없어요. 투표하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하죠?
A. 기표소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어 측면으로 설치하고, 대기 선거인은 기표대에서 1m 이상 떨어진 ‘선거인 대기선’ 밖에

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기표대에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기표를 잘못했어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A. 투표용지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니 신중하게 확인하고 기표해야 합니다. 기표 모양이 정확히 찍히지 않았더라도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거나,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경우에는 유효이니 이런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